

민관 합동 실무작업반에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참여하고 있으며, 금융기업이 포함된 민간지원단은 전문 분야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할 뿐, 실무 작업반 제도 설계 논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1. 관련 기사

□ 3.19.(목) 매일노동뉴스, “퇴직연금 기금화 지원단에 금융기업 관계자들만”

- 퇴직연금 기금화를 위한 정부 후속 논의체에 금융기업 소속 인사가 대폭 등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민간지원단은 실제 퇴직연금 기금화 논의에도 참여한다.
- 퇴직연금 기금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개방형,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기금 형태로 기금화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공공기관 개방형 사업자로 거론되는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 참여는 전무하다. 후속 조치를 위한 구성부터 공공성을 배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 설명 내용

□ 정부는 노사정 공동선언을 통해 합의한 기금형 퇴직연금의 구체적 설계 및 법령안 마련을 위해 민관 합동 실무 작업반을 운영 중(3.6~)

- 실무 작업반은 기금형 제도를 설계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로써, 정부측 4명(노동부·재정부·금융위·금감원)과, 노·사 단체 4명(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중기중앙회),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가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포함되어 있음(금융기업은 미포함)

* 전문가 구성: 전·현직 연금학회장 2명, 퇴직연금 전문가(교수) 2명, 연금 및 자산운용 전문가(교수) 1명, 국민연금공단연구원 1명, 근로복지공단연구원·법무부장(변호사) 2명

□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실무 작업반 아래 2개의 분과작업반을 운영하며, 분과작업반은 실무 작업반에 상정할 안건을 작성하는 역할을 수행

* 실무작업반원 中 전문가들이 분과작업반에 각각 배치되어 안건 작성을 총괄하는 역할 수행(노·사 단체는 각 분과에 자율적으로 참석)

□ 기사에서 언급한 금융기업이 포함된 “민간 지원단”은 분과작업반에서 안건을 작성할 때, 해외 사례·법률·회계 및 운용 규제·현장 적용 가능성 등 실무 작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 민간 지원단은 고정적으로 임명되는 형태가 아니며, 검토 필요사항에 따라 지원하고, 수시로 교체 및 추가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

* 현재 민간지원단은 1분과 9명, 2분과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가·노사단체 등 실무 작업반원의 추천에 따라 인원이 수시로 변동되는 중

○ 아울러, 민간 지원단은 전문 분야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할 뿐, 기금형 설계가 실질적으로 논의되는 실무 작업반 회의체에 참여할 수 없음

□ 정부는 노사정 공동선언에서 강조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의 취지인 ①가입자의 선택권 확대, ②수탁자 책임 등 노동자 수급권 보호, ③전문적 운용을 통한 수익률 개선의 원칙이 구체적 제도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책임자	과 장	남성욱 (044-202-7554)
		담당자	서기관	남덕현 (044-202-7657)

